

# 4/ 일본 주류 언론의 북한 인식

아사히신문을 중심으로\*

모리 도모오미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사실을 다룬 『아사히신문』(2002)

모리 도모오미(森類臣) 세쓰난대학 국제학부 준교수. 전공은 역사사회학·언론연구·문화연구·한반도 지역학(Korean Studies)이다. 최근 주요 논저로는 『韓国ジャーナリズムと言論民主化運動: ハンギョレ新聞をめぐる歴史社会学』(한국저널리즘과 언론민주화운동: 한겨레신문을 둘러싼 역사사회학, 日本経済評論社, 2019), “The Samjiyon Orchestra as a North Korean Means for Gender Based Cultural Diplomacy”(Pekka Korhonen과의 공동 집필, European Journal of Korean Studies, 2019), 『文在寅政権期における南北文化交流』(문재인 정부기의 남북 문화 교류, 現代韓国朝鮮学会, 2022) 등이 있다.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6A3A02102886).

<https://doi.org/10.29154/ILBI.2022.27.120>

## 1. 서론

최근 일본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이라고 한다)에 대해 대체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 먼저 일본인이 북한과 관련하여 어떤 사항들에 관심이 있는지, 여론조사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여론조사를 진행한 시기나 조사대상이 된 세대에 따라 다소 차이가 보이기는 하지만, 종합해 보면 관심 사항은 ‘일본인 납치’, ‘핵’, ‘미사일’, ‘정치체제(독재)’라는 단어들로 수렴되는데, 보다시피 모두 부정적인 것들이다.

예를 들어 일본 내각부가 공표한 2021년도 ‘외교에 관한 조사’[外交に関する調査]에 따르면 ‘북한관심사항’ 중에서 ‘일본인 납치 문제’는 79.8%, ‘미사일 문제’는 77.8%, ‘핵 문제’는 65.5%, ‘정치체제’는 44.4%를 기록하였다. 같은 조사에서 연령대별로 응답 내용을 살펴보면 60~70대가 ‘일본인 납치 문제’를 선택한 비율이 높았고, 40대는 ‘핵 문제’를, 그리고 30대가 ‘미사일 문제’를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sup>1</sup> 2020년도에 실시한 같은 조사에서는 ‘일본인 납치 문제’ 83.3%, ‘미사일 문제’ 73.2%, ‘핵 문제’ 70.1%, ‘정치체제’ 47.8%로 나타나, 비율은 약간 다르지만, ‘일본인 납치’, ‘핵’, ‘미사일’이 상위 1~3위를 차지한 것은 동일하다.<sup>2</sup>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온 데에는 물론 이유가 있다.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서는 2002년 9월 북일정상회담 당시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사죄한 것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이 사건은 그 후 일본의 대북정책에도 지속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sup>3</sup> 게다가 북한은 2006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핵실험

1 内閣府, 「外交に関する世論調査(令和3年9月)」 <https://survey.gov-online.go.jp/r03/r03-gaiko/index.html>(최종검색일: 2022. 7. 30.). 응답은 복수응답.

2 内閣府, 「外交に関する世論調査(令和2年10月)」 <https://survey.gov-online.go.jp/r02/r02-gaiko/index.html>(최종검색일: 2022. 7. 30.). 응답은 복수응답.

3 당시 북한의 최고지도자였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일본인 납치 이유에 대해서 “특수기관 일부의 맹동주의, 영웅주의”였다고 설명하고 사죄하였다. 이하 웹사이트와 문헌을 참조. 日本外務省, 「小泉総理大臣会見要旨」 [https://www.mofa.go.jp/mofaj/kaidan/s\\_koi/n\\_korea\\_02/summary.html](https://www.mofa.go.jp/mofaj/kaidan/s_koi/n_korea_02/summary.html)(최종검색일: 2022. 7. 4.); 寺林裕介, 「北朝鮮による日本人拉致に対する我が国の取組: 拉致被害者5名の帰国から10年間の経緯」, 『立法と調査』 No. 334, 参議院事務局企画調整室, 2012.

을 6차례에 걸쳐 반복하였고, 또한 미사일 발사실험도 현재까지 단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sup>4</sup>

위 여론조사 결과에도 나타나 있듯이 북한의 ‘정치체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이 전제되어 있지만, 한편으로는 흥밋거리로 여기는 측면도 있어서 일본 내에서 관심이 높은 편이다. 북한이 채택하고 있는 독재체제, 즉 ‘우리식 사회주의’를 일본에서는 세습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북한 정치체제와 그 실상에 대해서는 독재·세습·인민에 대한 억압과 같은 단어와 함께 언급된다.

여론조사라는 통계적 방법을 통해 얻어낸 위 결과는 비록 하나의 지표에 불과하다고는 하나, 일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자료이다. 이 데이터 자체의 옳고 그름은 논외로 하더라도, 대체로 일본의 주류 언론은 이 자료에 열거된 것과 연관된 이미지나 틀 안에서만 북한에 대한 언설(言說)을 재생산하고 확대해 나간다는 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북한에 대한 또 다른 상상력과 그 실천, 즉 북한을 다면적으로 조망하고 묘사하여 인식하려는 힘이 작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이해할 수 없는 나라라는 생각에 사로잡힌 채, 과연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나라인가에 대해서는 거의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에서의 이슬람에 대한 보도와 유사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이드(Edward W. Said)는 포스트콜로니얼리즘(postcolonialism)의 시좌(視座)에서 미국 미디어의 ‘이슬람’ 표상(表象)을 분석하고 통렬하게 비판하였다.<sup>5</sup> 사이드는 책의 서두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4 外務省, 「北朝鮮の核・ミサイル問題」 [https://www.mofa.go.jp/mofaj/area/n\\_korea/kakumondai/index.html](https://www.mofa.go.jp/mofaj/area/n_korea/kakumondai/index.html)(최종검색일: 2022. 7. 30.).  
5 エドワード・サイード, 浅井信雄 外 共訳, 『イスラム報道 増補版』, みすず書房, 2003. 초판은 다음과 같음. Edward W. Said, *Covering Islam: How the Media and the Experts Determine How We See the Rest of the World*, Routledge & Kegan Paul, 1981.

최근 15년간 미국이나 서양의 미디어는 무슬림(이슬람교도)이나 이슬람을 집중적으로 조명해 왔으나, 그 대부분이 … 과장된 스테레오타입과 시비조의 적의(敵意)로 점철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실제로 항공기납치나 테러리즘과 관련된 이슬람의 역할, 이란과 같은 이슬람 국가들이 ‘우리들’과 ‘우리들의 생활양식을 위협하고 있다는 수많은 서술 … 최근 음모론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여러 가지 억측들은 더욱 서양의 의식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슬람 세계에 관한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그룹은 눈에 띄게 비대해졌고, 무엇인가 위기적 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그들이 뉴스 방송이나 토크쇼에 불러 나와 모든 것을 다 안다는 듯한 태도로 이슬람에 대해 틀에 박힌 생각들을 설파한다.<sup>6</sup>(밀줄, 점선은 필자)

사이드는 미국 사회에서 이슬람을 표상하는 방식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으나, 위에 인용한 문장에서 밀줄 친 부분을 ‘일본’으로, 점선 부분을 ‘북한’으로 바꾸면 일본이 북한을 표상하는 방식에 거의 그대로 들어맞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이드가 책의 제목에서 사용한 ‘Covering’의 cover라는 영어 단어에는 ‘덮다[覆う], 씌우다[かぶせる]’라는 의미와 ‘보도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일본의 미디어는 북한을 ‘보도’함으로써 무엇을 ‘뒤덮으려’(覆いかぶせて) 하는 것일까.

북한을 어느 한 방향으로만 포착하고 그 틀에 끼워 맞추어 파악하려는 것은, 곧 북한이라는 나라를 다면적 이해하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다면적으로 이해하지 않는 것은 상대를 무시하는 것으로 이어지며, 상대의 행동에 대해 잘못된 대응을 할 가능성을 높인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지금까지 북한 이해·북한 이미지에 대한 확대재생산이 북일 관계의 개선이나 핵·미사일 문제의 해결을 방해하는 간접적인 요인이 된 측면도 있지 않을까. 북일 문제를 단순화하는 것은 복잡한 현안을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면도 있

6 エドワード・サイード, 浅井信雄 外 共訳, 『イスラム報道(増補版)』, みすず書房, p.v

으나, 북일 간에 존재하는(존재했던, 혹은 앞으로 생길지도 모르는) 복수·다차원의 커뮤니케이션의 통로를 닫아 버리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북일 관계만이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세에도 더욱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안전보장론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아도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세부적인 내용이야 어떻든, 큰 틀에서는 소프트랜딩을 유도하는 대응이야말로 가장 좋은 선택지이며,<sup>7</sup> 이를 위해서 북한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이다.

## 2. 선행연구 검토, 본 연구의 과제와 분석 방법

본 논문은 일본의 북한 이해에 영향을 미친 행위자로서 주류 언론의 보도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 주류 언론의 북한 보도가 일본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북한 인식에 영향을 미쳐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필자가 파악한 바로는 학술적 차원에서 통시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 연구는 없었다.

몇 가지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고찰하면, 주류 언론의 북한 보도는 시대에 따라서 긍정적 보도와 부정적 보도 간의 진폭이 큰데, 이러한 현상은 일정한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균열의 연속처럼 보인다.

먼저 일본 주류 언론의 북한 보도에 대해, 최근의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려 한다. 본 논문에서는 ‘1950~1970년대 보도에 관한 선행연구’, ‘2002년 9월 이후를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은 선행연구’로 나누어 검토한다. 한편, 1980~1990년대의 북한 보도를 분석한 선행연구는 매우 드물다.<sup>8</sup> 이

7 阪田恭代, 「日本の対北朝鮮政策: 外交面での対応」, 『朝鮮半島のシナリオ・プランニング』(平成26年度 外務省外交・安全保障調査研究事業), 公益財団法人日本国際問題研究, 2014, 143~153쪽.

8 필자가 파악한 바로는, 이 시기의 북한 보도에 대해 상세한 논의를 진행한 연구는 渡辺武達, 「メディア操作される北朝鮮像: メディア・ホークス その(四)」, 『評論・社会科学』 50号, 1994가 있다. 와나타베(渡辺)는 주로 1990년대 초에 발생한 조선반도 제1차 핵위기를 일본의 주류 언론이 어떻게 보도하였는지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하였다.

것은 아마도 북한 보도에 학술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연구자가 대부분 지역 연구자가 아니라 미디어 관련 연구자이기 때문인 듯하다. 연구자가 기울이는 학술적 관심이 대부분 2002년 9월 이후, 주류 언론이 대대적으로 ‘북한 보도’를 쏟아낸 현상에 쫓려 있는 것이다.

그러나 1980~1990년대에도 조선반도(한반도)를 둘러싸고 중요한 사건들이 빈발하였기 때문에, 이 기간의 북한 보도에 대한 연구도 앞으로는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1) 1950~1970년대에 관한 주요 선행연구

1950~1960년대 시기, 북한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사상(事象)으로는 ‘귀국사업’을 들 수 있다. 귀국사업은 재일조선인이 북한으로 집단 이주한 현상으로, 1959년부터 시작되었다. 재일조선인 약 9만 3,000명(일본인 아내 약 1,800명 포함<sup>9</sup>)이 정치사회적인 이유로 북한으로 이동하여 정착하였다. 재일조선인 대부분은 조선반도 남부 출신이었음에도 조선반도 북부로 대거 ‘귀국’(歸國)하였고, 게다가 자본주의국가에서 사회주의국가로의 이주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의 대대적인 인구 이동이었다. 이 ‘귀국사업’이란 무엇이었는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학술연구가 축적되어 왔다.<sup>10</sup> 이러한 선행연구에서 ‘귀국사업’과 주류 언론의 보도와의 관계는 어떻게 지적되었을까.

선구적인 학술연구로서는 다카사키 소지(高崎宗司)·박정진(朴正鎭) 편저(2005) 『귀국운동은 무엇이었나: 봉인된 일조관계사』(歸國運動とは何だったのか: 封印された日朝関係史)를 들 수 있다. 이 책은 다카사키를 중심으로 한 공동연

9 일반적으로는 조선인 남편과 함께 북한으로 건너간 일본인 아내(日本人妻)가 유명하지만, 조선인 아내와 함께 북한으로 건너간 일본인 남편도 있었다. 『아사히신문』 1960년 1월 26일 기사 「조선인 아내와 함께 도항」을 참조.

10 과거에 출판된 중요 학술연구서로는 高崎宗司·朴正鎭 編著, 『歸國運動とは何だったのか 封印された日朝関係史』, 平凡社, 2005; テッサ・モーリス・スズキ, 『北朝鮮へのエクソダス: 「歸國事業」の影をたどる』, 朝日新聞社, 2007; 朴正鎭, 『日朝冷戦構造の誕生: 1945~1965 封印された外交史』, 平凡社, 2012; 菊池嘉晃, 『北朝鮮歸國事業の研究: 冷戦下の「移民的歸還」と日朝・日韓関係』, 明石書店, 2020; 松浦政伸, 『北朝鮮歸國事業の政治学: 在日朝鮮人大量歸國の要因を探る』, 明石書店, 2022 등이 있다.

구의 성과물이며, 출판된 2005년 시점에서는 귀국사업에 관한 최초의 종합적인 학술서였다. ‘귀국운동의 경과와 배경’, ‘국제관계에서 본 귀국사업’, ‘북한에게 “귀국사업”은 무엇이었나’, ‘일본공산당 및 일본사회당의 대응’, ‘일조협회(日朝協會)의 성격과 역할’ 등 귀국사업에 관련된 다양한 요소들을 학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 분야의 필독서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주류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도 3개의 장을 할애하여 검토하고 있다.<sup>11</sup> 본 논문과 관련해서는 다카사기 소지의 「제10장 『아사히신문』과 『산케이신문』은 귀국운동을 어떻게 보도하였는가」가 특히 주목할 만하다. 다카사키의 논문에 따르면 『아사히신문』·『산케이신문』 모두 귀국사업에 대한 일본적십자사와 일본 정부의 자세를 ‘인도적’(人道的)이라는 관점을 내세워 무비판적으로 지지하였다. 또 귀국사업에 관련된 관계자·관계단체의 이해관계나 북한의 체제에 대한 정치적인 분석이 거의 없었던 점에 대해서도 다카사키는 지적하고 있다. 귀국사업이 시작되었을 당시에는 우파 미디어인 『산케이신문』도 귀국사업이나 북한에 대해 호의적이었다는 것을 논증하였다. 그런가 하면, 『아사히신문』이 사설에서 북한을 ‘지상의 낙원’(地上の樂園)이라고 표현한 적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귀국사업에 관한 주류 언론의 영향에 대해서는 박정진이나 기쿠치(菊池)도 언급은 하고 있지만,<sup>12</sup> 최근의 뛰어난 연구로는 마쓰우라 마사노부(松浦政伸)의 『북조선 귀국사업의 정치학: 재일조선인 대량귀국의 요인을 탐구한다』를 들 수 있다. 마쓰우라는 리프먼(Lippmann)의 ‘의사환경’(疑似環境, Pseudo Environment) 개념을 원용(援用)하여, 애국주의·실리적 관념·도덕적

11 高崎宗司, 「第10章 『朝日新聞』と『産経新聞』は帰国運動をどう報じたのか」; 尾高朋子・高崎宗司, 「第11章 帰国運動に関する『世界』と『中央公論』の論調」; 李尚珍, 「第12章 『東亜日報』は帰国問題をどう論じたのか」로 구성되어 있다.

12 학술서적으로는 朴正鎮, 『日朝冷戦構造の誕生 1945~1965: 封印された外交史』; 菊池嘉晃, 『北朝鮮帰国事業の研究: 冷戦下の「移民的帰還」と日朝・日韓関係』이 있다. 또한 기쿠치(菊池)는 본 논문을 집필하고 있는 현재, 귀국사업 당시 미디어 보도를 분석한 다음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菊池嘉晃, 「在日コリアンの北朝鮮帰国事業とメディア: 冷戦下の「移民的帰還」を促した報道内容の分析」, 『移民研究年報』 28, 2022, 47~62쪽.

책임이라는 3가지 규범을 중심으로 북한에 대한 긍정적인 의사환경이 형성되었고, 이것이 재일조선인들이 북한으로 ‘귀국’(이주)하는 과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sup>13</sup> 마쓰우라는 애국주의라는 의사환경의 주요 요소로 ① 민족학교 네트워크를 통한 조국지향의 내셔널리즘, ② 일본인 지식인의 지원(귀국협력운동 추진), ③ 주류 언론의 무비판적인 북한 현지 정보 등 3가지를 들었다. 또 실리적 관념이라는 의사환경의 주요 요소로는 ① 북한의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 ② 북일무역의 가능성이라는 두 가지를 제시하였다. 끝으로 도의적 책임이라는 의사환경의 주요 요소로는 ① 역사관의 단일화(북한중심사관), ② 일본의 전쟁책임 강조 등 두 가지를 들었다. 일본의 주류 언론은 이 세 가지 의사환경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 행위자였다. 필자가 아는 한 당시의 상황에 대해, ‘의사환경’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이론적으로 설득력 있게 설명한 것은 마쓰우라가 처음이다.

## 2) 2002년 9월 이후를 주요 연구대상으로 다룬 선행연구

2002년 9월에 성사된 북일정상회담과 북일평양선언 이후 돌연 일본인 납치 문제가 주류 언론에서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주류 언론에서는 북한을 ‘단죄’(斷罪)하는 논조가 다수를 차지하기 시작하였고, 보도의 양도 늘어났다. 그로부터 시간이 흘러, 당시 주류 언론의 북한 보도 역시 학술연구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였다. 가와카미 가즈히사(川上和久)의 『북조선보도 정보조작을 파헤치다』(北朝鮮報道 情報操作を見抜く)는 학술서적은 아니지만 대학에 소속된 연구자가 집필한 책으로, 북한이 테러국가라는 전제하에<sup>14</sup> 2002년 9월 북일정상회담 이전까지의 신문 보도는 북한에 대한 비판이 부족했다고 지적하고, 2002년 9월 이후 북한에 대한 비판을 전면적으로 시작한 보도에

13 松浦政伸, 『北朝鮮帰国事業の政治学: 在日朝鮮人大量帰国の要因を探る』, 150~151쪽, 松浦政伸, 「『疑似環境』と政治: 北朝鮮帰国事業における総連と北朝鮮ロビーの役割を中心として」, 『国際政治』 187号, 2017, 80~96쪽.

14 川上和久, 『北朝鮮報道 情報操作を見抜く』, 光文社, 2004, 24쪽.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평론집이기는 하지만 가와카미와는 정반대의 진영에서 주장을 펼친 것이 인권과보도·연락회 편, 『검증·「납치귀국자」 마스크 보도』(検証·「拉致帰国者」マスコミ報道)이다. 이 평론집은 2002년 9월 북일정상회담 이후의 주류 언론 보도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다. 예를 들어 아사노(淺野)는 미디어 보도에 대해 “일본의 주류 언론은 북한을 ‘무법자의 나라’, ‘악마의 나라’ 등으로 일방적으로 비난해 왔다. 외무성·공안경찰이 흘린 정보를 받아쓰는 것도 변함없었고, 마치 집중호우처럼 어느 한 방향으로 치우친 감정을 유도하는 일본 독재 미디어의 병리가 다시 한 번 드러났다.”라고 통렬하게 비판하였다.<sup>15</sup>

학술논문으로서는 기무라 요지(木村洋二)·이타무라 히데노리(板村英典)·이케노부 게이코(池信敬子)의 공동연구가 시기적으로 가장 빠를 것이다.<sup>16</sup> 기무라 등은 소셜네트워크 분야의 독자적 이론인 소시온이론<sup>17</sup>을 바탕으로, 2002년 9월 직후 일본의 신문 보도를 면밀하게 정량 분석하였다. 또한 기무라 등의 논문이 가진 특징은 납치 문제에 대한 저자(기무라 등)의 생각과 문제의식을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sup>18</sup> 그 후로 김정환(金京煥)·이광호(李光鎬)·이토 다카시(伊藤高史)·스미카와 하루히토(住川治人)·우위치엔(吳雨倩) 등의 연구가 뒤를 잇는다.

김정환의 연구는 본고의 주된 관심 대상인 2002년의 북일정상회담이 아니라,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을 일본의 메이저 방송국에서 어떻게 보도하였는가를 다루었는데, 당시 일본 미디어의 북한 보도에서 나타나는 특

15 人權と報道・連絡会 編, 『検証·「拉致帰国者」マスコミ報道』, 社会評論社, 2003, 27쪽.

16 木村洋二 外, 『「拉致」問題をめぐる4大新聞の荷重報道: 多元メディアにおける『現実』の相互構築をめぐって』, 『関西大学社会学部紀要』 35(3), 2004, 89-121쪽; 木村洋二 外, 『「拉致」問題をめぐる4大新聞の荷重報道(2): 小泉首相再訪朝に関する報道と荷重分析』, 『関西大学社会学部紀要』 36(1), 2005, 119-154쪽; 木村洋二 外, 『「拉致」問題をめぐる4大新聞の荷重報道(3): 『日朝実務者協議』を報じる見出し語の分析』, 『関西大学社会学部紀要』 37(1), 2005, 1-56쪽.

17 소시온이론에 대해서는 木村洋二, 「ソシオン理論の骨子 (1)」, 『関西大学社会学部紀要』 36(1), 2005, 233-256쪽을 참조.

18 木村洋二·板村英典·池信敬子, 『「拉致」問題をめぐる4大新聞の荷重報道: 多元メディアにおける『現実』の相互構築をめぐって』, 90쪽.

정을 정리한 부분이 흥미롭다. 김경환은 이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일본 방송 미디어의 보도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다면적으로 포착하여 조선반도의 변동에 대해 일본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보여 주는 데는 실패하였고, 회담의 일정, 회의장 소개, 공동선언 등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다.”라고 결론지었으나, 한편으로는 남북정상회담이 일본의 북한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sup>19</sup>

이광호는 2004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약 6개월간의 방송에 대하여 한국과 일본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일본의 보도가 부정적·감정적이었던 반면, 한국의 보도는 긍정적이면서 냉정한 태도를 유지하였다고 결론지었다.

스미카와는 김경환, 이광호의 연구결과를 이어받아, 2003년부터 2007년까지, 8월 1일부터 7일 사이에 게재된 『아사히신문』·『요미우리신문』의 북한 관련 기사를 분석하고, 나아가 그 결과를 한국 관련 보도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아사히신문』·『요미우리신문』의 한국 보도와 북한 보도는 주제의 다양성에서 차이가 있음을 도출하여, “주제가 제한된 북한 보도를 통해서서는 북한의 사회나 보통 사람들의 생활은 전혀 연상할 수 없다.”라고 지적하며, “스테레오타입화 되어 버린 북한관이 사회에 만연하고 있을 때, 그에 대해 의문을 던지는 것이 본래 저널리즘의 역할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기관 역시도 무자각적으로 스테레오타입을 받아들여서 재생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언급하였다.<sup>20</sup>

우위치앤의 논문은 2016년 한 해 동안의 『아사히신문』·『요미우리신문』의 북한 관련 보도를 대상으로 텍스트마이닝(textmining) 기법을 활용하여 양적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두 신문의 관심이 일본인 납치 문제에서

19 金京煥, 「韓国・北朝鮮首脳会談に関するテレビ報道の内容分析」, 『マス・コミュニケーション研究』 59号, 2001, 147~148쪽.

20 住川治人, 「日本の2大新聞の北朝鮮報道: 韓国報道・世論動向と比較して」, 『茨城大学人文学部紀要 人文コミュニケーション学科論集』 6, 2009, 178~179쪽.

핵·미사일 문제로 옮겨 갔다고 지적하였다.

이상과 같이 ‘북한’ 보도를 검토한 선행연구는 북일관계에 커다란 이슈가 발생한 시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 분석은 시기를 가능한 한정하여 사회학적, 혹은 정치학적인 방법론을 사용하여 진행하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연구를 부분적으로 계승하되, 보다 통시적(通時的)인 연속성을 고려하면서 일본 주류 언론의 북한 보도에 대한 전체상을 부감(俯瞰)하고자 하였다.

### 3) 본 논문의 과제와 분석 방법

위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논문에서 밝히고자 하는 지점을 정리하도록 하겠다. 서론에서 밝힌 것과 같이, 본 논문은 일본 주류 언론의 ‘북한’ 보도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본 주류 언론의 북한 인식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현재와 같은 것이 되었는지, 대략적인 개념도를 그려 보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 북한 보도의 변천 과정을 역사사회학적으로 추적해 보도록 하겠다.

구체적인 분석 방법으로는 북한 보도 전체를 대상으로 미디어효과연구의 주요 이론인 ‘주류 언론의 의제설정’(agenda setting)과 ‘프레이밍효과’(framing effect)를 원용한다. 이를 통해 미디어 보도가 수용자(audience)의 인지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다. 주류 언론의 의제설정 기능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What to think)보다도 “무엇에 대해 생각할 것인가”(What to think about)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류 언론은 북한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보도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매김으로써 쟁점을 고정화하는 작용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프레이밍을 통해 쟁점을 평가하는 구체적인 방식을 수용자에게 제공하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지면 관계상 1948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북한 보도를 다루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시대별로 중요한 주제를 몇 가지 선정하여, 이에 대해서 개괄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이 논문에서 다루

는 주제는 어쩌면 필자의 자의적인 선택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북일관계 혹은 일본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 주었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한 주제이기도 하므로, 자의적인 선택 부분에 대해서는 독자의 양해를 구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귀국사업과 북한 현지 보도(1950~1970년대), 대한항공기 858편 폭파사건(1980년대), 북일정상회담과 납치 문제(2002년), 최근의 남북관계·북미관계 동향(2018년) 등의 주제를 선정하였다.

### 3. 귀국사업을 둘러싼 보도: 1950년대 후반~1970년대

1950~1960년대의 ‘북한’ 보도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본 논문에서는 ‘귀국사업’에 관한 보도를 선택하였다.

지면 관계상 전면적인 분석은 어렵지만, 당시 주류 미디어가 어떠한 논점을 제시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사실을 중심으로 분석해 봄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아사히신문』을 사례로 제시하고자 한다.

#### 1) ‘귀국사업’ 개시와 그 이후: 1959~1965년

귀국사업에 대해, 『아사히신문』은 기본적으로 인도(人道)·휴머니즘이라는 프레임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이 사업을 긍정하고 지지하는 주장을 펼쳤다. 『아사히신문』은 1959년에 관련 사실을 17편 게재하였는데, 『아사히신문』의 입장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중요한 사실은 1959년 2월 2일 「북한 귀국에 관하여 국제여론에 호소한다」이다. 이 사실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점을 제시한다.

- ① 북한으로 귀국하기를 희망하는 것은 기본적 인권에 관련된 문제이며, 본인의 희망을 들어주어야 한다.
- ② 재일조선인의 귀국을 추진하는 것은 세계인권선언이나 적십자 국제회의의 결의에 따른 것이며, 신속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 ③ 한국 측이 귀국문제에 반대하는 것은 인도적 조치에 반하는 행위이다. 세계인권선언 제13조 2항 위반이며, 1957년 적십자국제회의의 결정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 ④ 한국은 일본인 어업인을 억류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적 인권을 짓밟는 무도한 행위이다.

『아사히신문』은 이 사설에서 일본의 “휴머니즘에 따른 국가적 행동”을 국제여론이 정당하게 평가하고 지지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이 펼치는 주장의 기저에는 휴머니즘이나 인권이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러나 위 사설이 발표된 지 6년 후인 1965년 3월 31일자의 사설 『『법적지위』는 이치에 맞게』에서는 재일한국인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아들 손자 세대까지 영주(永住)를 보증하고 게다가 것처럼 광범위한 내국민 대우를 보장해 준다면 장래에는 이 좁은 국토 안에서 이상한, 그리고 해결이 곤란한 소수민족 문제가 발생하게 되지 않을까. 출입국 관리상의 일반 외국인 취급 방식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특권적’인 법적지위를 향유하는 것이, 과연 재일한국인을 위한 일이 될 것이라고, 일률적으로 단정 지어도 되는 것일까.

이것은 재일조선인(한국인)이 일본의 패전 이후 일본에 머물 수밖에 없게 된 이유를 경시한 주장이며, 휴머니즘이나 인권을 중시하는 주장이라고 보기 힘든 언설이다. 『아사히신문』의 인도주의는 선행연구에서 드러난 것처럼 귀국사업에 대해서 “일본적십자와 일본 정부의 자세를 ‘인도적’이라며 거의 무비판적으로 지지”<sup>21</sup> 하는 한편, 재일조선인(한국인)의 일본 국내 지위 문제에 대해서도 ‘외국인’, ‘타민족’을 강조하며 일본 국내 정치와는 분리할

21 高崎宗司, 「第10章 『朝日新聞』と『産経新聞』は帰国問題をどう報じたか, 『帰国運動とは何だったのか 封印された日朝関係史』, 平凡社, 2005, 304쪽.

것을 주장하고 있다. 재일조선인(한국인) 문제를 서둘러 일본 문제에서 분리해 내고자 하는 욕망이 엿보인다. 이 점에서 『아사히신문』의 휴머니즘은 일본 정부 관계자의 견해(인권감각)와 거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인권감각은 귀국사업에 대해서나 법적지위 문제에 대해서나 일관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마쓰우라는 “진보적 지식인에게서 귀국사업을 실현시키는 것이 일본인으로서 ‘전쟁책임’을 지기 위한 최소한의 도덕이자, 전후 일본인에게 부여된 의무로 여겨지기도 했다. 학문적 입장때문이 아니라, 귀국협력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전쟁책임론’을 끌어 온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는데,<sup>22</sup> 일부 지식인들에게는 이처럼 전쟁책임, 즉 식민주의의 청산 문제가 귀국사업추진협력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점도 중요한 논점이다.

## 2) ‘귀국사업’ 종료와 재개, 일본인 아내 문제: 1966~1979년

‘귀국사업’은 당초 예정대로 1966년에 일단 종료되었다. 같은 해 8월 17일 『아사히신문』은 사설 「북한귀환협정의 연장」을 게재하였다. 이 사설에서는 “우리는 협정의 연장 기간 문제를 포함하여 정부의 신중한 배려를 바란다”, “북한 귀환문제는 외국의 압력에 영향 받는 일 없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인도적인 견지에서 처리해 나갈 것을 정부에 바란다.”라고 주장하였다.

『아사히신문』은 사설 및 외부기고자의 글을 신는 「논단」(論壇)에서 인도(人道) 혹은 휴머니즘을 전면에 내세우며 재일조선인의 목소리를 소개하는 한편 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것을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1967년 5월 13일자 기사 「북한귀환협정 종료, 나는 돌아갈 수 없나, 불안감 고조되는 재류자」에서는 귀국사업이 종료된 것을 슬퍼하는 재일조선인 가족을 소개하였다. 또 1967년 5월 12일자 사설 「북한귀환협정 종료」에서는 “인도적인 견지에서, 가능한 편의를 제공하여 귀국의 길을 활짝 열어두도록 노력하는

22 松浦政伸, 『北朝鮮帰国事業の政治学: 在日朝鮮人大量帰国の要因を探る』, 173쪽.

것”을 정부에 주문하고 있다.

1971년 2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북일적십자회담에서 일본적십자와 북한 적십자가 귀국사업을 재개하기로 합의하자, 2월 7일 사설 「북한문제 합의를 기뻐한다」에서 합의를 높이 평가하고, 귀국은 인도적 문제라는 점을 반복하여 주장하였다. 또 일본적십자·북한적십자의 합의를 일본 정부가 신속하게 승인하고 귀국사업을 추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제한되었던 북한과의 교류·접촉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가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도록 요구하였다.

북한과의 교류·접촉에 대해서는 1971년 10월 24일 사설 「북한과의 왕래 제한을 완화하라」에서도 강조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1971년 5월에 재개된 귀국선의 출발과 관련하여, 1만 7,000명의 귀국희망자가 있었으나 실제로 귀국한 사람은 1,000명에 불과하였던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그 원인은 일본 정부가 북일 간의 왕래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운 점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재일조선인의 북한 방문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하면서 “재일조선인에 대한 차별이 지나치다.”, “많은 재일조선인이 체재하고 있고, 역사적으로도 특수한 관계에 있는 우리나라와 북한의 사이가 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것은 실로 불합리하며, 조속히 개선해야 할 문제이다.”라며 북일 간의 왕래 제한을 완화할 것을 주장하였다.

1971년 귀국사업이 재개되자, 중요한 의제로 부상한 것이 일본인 아내(日本人妻) 문제였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1959년에 귀국사업이 시작되자 재일조선인의 배우자로서 일본인 여성 약 1,800명도 북한으로 이주하였다. 이 사람들은 빠른 시기에 고국을 다시 방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어려웠다. 또 어떤 사람은 거주지나 안부조차 알 수 없게 되어버리기도 했다. 이것이 소위 ‘일본인 아내 문제’(日本人妻問題)가 되었다. 1974년에 일본인처 자유왕래실현운동본부(日本人妻自由往來實現運動本部)가 결성되었고, 나아가 1975년부터 이 문제가 정부·외교 차원에서도 논의되기 시작하였다.<sup>23</sup> 특히 당시 자민당 소속의 참의원 의원이었던 아마구치 요시

코(山口淑子)<sup>24</sup>가 기고한 「논단: 명량한 북한의 일본인 아내, 모국의 차별에서 해방되어」는 주목할 만하다(『아사히신문』 1979. 5. 24.). 야마구치는 지명도도 매우 높았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지도자인 김일성과 회담을 하는 등 북한 측과는 독자적인 인맥을 구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야마구치는 “일본에서는 이전부터 조선으로 건너간 여성들이 비참하고 절망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정말일까요?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이 문제가 다루어진 적이 있고, 저도 한 명의 정치인으로서 이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어떻게든 실상을 파악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라고 결의를 밝히고, 북한을 방문하였다. 야마구치는 일본인 아내 5명과 면담하고 그 결과를 “그녀들과 만나보고, 일본에서 떠들썩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엉터리이고 근거가 없는 이야기인지 알게 되었습니다.”라면서 “이미 일본인으로서의 의식은 사라지고, 북한 사람의 아내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그곳 풍토에 융화되어 남편의 나라에 이바지하려고 하는 모습이 역력하였습니다.”라며, 5명의 일본인 아내의 상황을 일본인 아내 전체의 상황처럼 확대하여 긍정적으로 보고하였다.

한편 『아사히신문』은 같은 해 6월 3일에 마찬가지로 「논단」 코너에서 「'일본인 아내 리포트'에 의문, 공식 발표만으로는 실태 알 수 없어」(김원봉, 한국민단중앙본부국제국차장)를 게재하여, 야마구치의 기고에 대한 반론을 실었다. 이 기고에서는 실제로 북한으로 건너간 일본인 아내들이 보내온 생활고를 호소하는 편지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야마구치 씨의 리포트는 너무나도 독단적이어서, 사실을 알려고 하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 “야마구치 씨의 리포트는 일본인 아내의 생활의 내면을 전달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서도 일본 내에서의 이야기들이 엉터리이고 근거가 없다고 단정하는 것이야말로

23 「邦人妻の行方 北朝鮮が調査 自民議員団に約束」, 『朝日新聞』, 1975. 8. 2.; 「日本人妻問題などただ参院予算委」, 『朝日新聞』, 1977. 3. 28. 등.

24 본명은 오타카 요시코(大鷹淑子). 배우·모델·TV프로 사회자 등을 거쳐 참의원 의원이 되었다. 전전(戰前)에 리상란(李香蘭)이라는 이름으로 일본·만주·홍콩 등에서 예능 활동을 했다. 전전에는 만주영화협회의 스타 배우로서 활약하였고, 전후에도 높은 지명도를 유지했다.



오히려 근거가 없는 독단에 불과하다.”, “아마구치 씨는 상황을 너무 단순하게 바라보기 때문에, 북한에 쉽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인 아내 문제도 북일관계의 현안 사항으로서, 중요한 아젠다로 설정되었다.

#### 4. 북한 사회를 둘러싼 보도: 1950년대 후반~1970년대

1950년대 말부터 1970년대는 일본 주류 언론에서 북한에 대한 긍정적인 보도가 반복되었던 시기이기도 하다. 여기에서도 『아사히신문』을 주요 사례로 제시하도록 하겠다.

『아사히신문』은 아사히신문사 특파원이나 신문사에서 위탁한 외부 지식인(평론가·저널리스트·학자)의 ‘북한’ 현장보고, 연재 등을 게재하였다. 그중에서 1950년대에 주목할 만한 보고를 쓴 사람이 히노 아시헤이(火野葦平, 소설가)<sup>25</sup>다. 히노는 1955년 5월에 중국의 단둥(丹東, 당시에는 안둥(安東))에서 압록강을 건너 평양에 들어가 취재를 하였다. 이 취재를 바탕으로 「북한을 방문하여, 가장 멀어진 가장 가까웠던 나라」를 1955년 6월 6~8일에 걸쳐 3회 연재하였다. 제목은 각각 「폭탄의 흔적의 연속」(6월 6일), 「전원풍경에 사라지지 않은 해자[壕]」(6월 7일), 「기괴한 남북의 경계선」(6월 8일)이다. 첫 편에서는 한국전쟁의 생생한 상흔이 남아 있는 풍경을 묘사하고, 전후 부흥에 힘을 쏟는 북한의 모습을 그렸다.<sup>26</sup> 그런데 히노가 어떤 경위로 북한을 방문·취재하여 아사히신문에 짧은 연재를 하게 되었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25 1907~1960년. 아쿠타가와상 수상작가. 『妻と兵隊』 등 군대 3부작으로 유명. 전후에는 전범(戰犯)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26 6월 6일 기사에는 평양의 모란봉극장(당시에는 지하극장)에서 최승희(崔承喜)의 공연을 관람한 사실을 기술하고 있다.

귀국선 왕래가 결정된 1959년에는 북한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도하는 태도가 뚜렷했다. 예를 들어 1959년 8월 27일자 기사 「북한은 만든다, 과학 기술에 의한 공업진흥」에서는 조선중앙통신의 보도 내용을 거의 그대로 전달하였다. 그리고 평양의 건직물공장·성진(城津)제강소·대안(大安)전기기계 공장·낙원(樂元)기계공장의 사진을 소개하면서 “과학기술을 통한 공업생산 진흥의 열의(熱意)가 사진을 통해서도 잘 전달된다.”라며, 북한의 공업생산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결론짓는다.

이 시기 북한 보도에서 가장 활발히 활약한 『아사히신문』의 기자는 이리에 도쿠로(入江徳郎)다. 이리에는 아사히신문사에 입사한 후 특파원으로서 노몬한사건을 취재한 적도 있다.<sup>27</sup> 아사히신문사는 북한을 취재할 기자로, 실력 있는 기자였던 이리예를 특파원으로 삼은 것이다.<sup>28</sup>

이리에는 특파원으로서 청진(淸津)·평양을 취재하고 1959년 12월 25일자 기사 「『내달리는 말』 북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비행장이 변하여 아파트」를 썼다. 이 기사의 내용 중 일부를 인용한다.

북한의 경제건설 속도는 엄청나다. 한국전쟁으로 철저히 파괴되었으면서도 1954년부터 부흥 3개년 계획으로 재건을 시작하였고, 뒤이어 사회주의 제1차 5개년 계획에 돌입하였다. 1961년까지 걸릴 예정이었던 5개년 계획을 2년이나 앞당겨 올해 중에 초과 달성해 버리겠다는 기세다. 그 결과 철, 전력, 시멘트, 화학비료나 곡물의 인구 1인당 생산량은 일본을 앞지르게 될 것이라고 북한 정부는 이야기하고 있다. 제시된 숫자만 보아서도 다 알 수 없지만, 천리마가 맥진하는 모습이 역력하게 느껴진다.

이리에는 이 기사에서 평양에는 노동자용 아파트가 빼곡하게 들어서 있다는 것, 주요 공장이 24시간 체제로 가동되고 있다는 것, 북한으로 ‘귀국’

27 「落下傘の敵も許さじ 外蒙国境の華, 島田隊長手記」, 『朝日新聞』, 1939. 7. 4.

28 「検証 昭和報道177 南北朝鮮への視線2」, 『朝日新聞』, 2009. 12. 24. 이리에는 나중에 『아사히신문』 조간 1면의 칼럼 「天声人語」를 담당하는 등 신문사를 대표하는 기자가 되었다.

한 재일조선인을 환영하는 무대공연의 거대한 스케일, 김일성의 정치력과 인품 등을 소개하고, 북한에서 195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천리마운동’(생산증산운동)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 등을 보도하였다.

또 1960년 1월 9일자 기사 「북한을 알아보는 「두 개의 혁명」」에서는 북한에서 진행되고 있는 문화혁명(문맹 퇴치와 성인교육)·기술혁명(공업화, 농촌의 수리·기계화·전력화)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도하였다. 이리에는 “1946년에 250만 명이었던 문맹 인구는 4년 만에 일단 사라졌다. 7년간의 의무교육제도를 완성하고, 지금은 ‘성인학교’를 여러 개 만들고 있다.”, “위생을 향상하여 생산성을 높이려는 최근 수년간의 노력은 평양을 비롯한 전국을 완전히 청결하게 탈바꿈시켰다. 평양은 도쿄도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청결하다.”, “피딱지처럼 보기 흉한 조선의 초가집들뿐이었던 과거 농촌의 풍경은 기계화와 함께 착착 변화해 가고 있다.”라고 언급하는 등 북한의 성장을 강조하였다. 물론 맥주의 질이 그다지 좋지 않다거나 과자의 종류가 적다거나 라디오 생산이 부족하다는 등의 약점도 언급하고는 있지만, 기사 전반은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보도다. 이 기사가 게재된 다음 날인 1월 10일에는 오카미쓰(岡光) 특파원이 촬영한 사진 6장이 ‘새로운 북한의 표정’이라는 제목으로 4면에 게재되었다.

이리에는 이후 1960년 1월 12일부터 16일까지 「38도선의 북쪽」(38度線の北)이라는 연재를 5회에 걸쳐 진행하였다. 각 편의 제목은 「사회주의적 온천, 할당으로 무료보양」(1960. 1. 12.), 「김일성이라는 장군, 미남자에 소탈하다」(1960. 1. 13.), 「들새들의 천국·비무장 지대, 유유자적 무리지어 날다」(1960. 1. 14.), 「벽신문의 위력, 마을의 불결함부터 취한(醉漢)까지 일소(一掃)」(1960. 1. 15.), 「내일을 향한 눈, 일하면 먹을 수 있다, 파고드는 정치」(1960. 1. 16.) 등이다.

이리에의 위 보도에 대해서, 마쓰우라(松浦)는 “귀국자를 기다리는 ‘조국’의 행복한 생활이라는, 북한 정부가 만든 이미지를 그대로 무비판적으로 보도한 것이었다.”<sup>29</sup>라고 평가하였다.

‘귀국사업’에서 북한에 이주한 사람들 중에는 적어도 일본 국적자

6,679명이 포함되어 있고, 그중에는 일본인 아내 약 1,800명이 포함되어 있다.<sup>30</sup> 이리에는 이 일본인 아내에 대해서도 보도를 하였다. 이리에게 보도한 사례는 사토 하루코(佐藤春子) 씨[북한으로 이주한 이후에는 ‘박춘자’(朴春子)]로, 일본에 있었을 적의 빈곤한 생활과는 크게 달라졌다는 사토 씨의 증언을 소개하고 있다.<sup>31</sup>

북한의 사회 상황을 긍정적으로 다룬 것은 이리에서만은 아니다. 저명한 평론가인 마루야마 구니오(丸山邦男)는 1960년 2월 1일 「친일적인 북한」이라는 기사를 『아사히신문』에 기고하면서, 『아사히신문』의 보도에 대해 “본지에서도 이리에·오카미쓰 특파원이 있는 그대로를 적절하게 보도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북한이 이 정치노선 이외에, 35년 간에 걸친 일본의 식민지배와 한국전쟁으로 인해 철저히 황폐화된 상태에서 부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라고 썼다.<sup>32</sup>

물론 전부 긍정적인 기사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1960년대 후반이 되면 북한의 실상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1968년 1월 29일의 「(해설) 균형을 잃은 ‘천리마’ 북한의 내부 상황」은 ‘당대회’, ‘천리마’, ‘관료주의’, ‘국방비’로 항목을 나누어 북한의 실상을 분석하였는데, 모두 비판적인 논조였다. 예를 들어 천리마운동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전망을 결여한 단순한 경쟁주의나 성적 부풀리기 보고 같은 결합도 발생하여, 경제발전에 상당한 불균형이 보이는 듯하다.”라고 냉정하게 비판하였다. 또 ‘관료주의’에 대해서도 “해방 후 일관되게 지속해 온 김일성 체제 안에서도, 이제는 관료주의의 폐해가 보이기 시작했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닐까?”라고 쓰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적 논조의 기사는 예외적인 것이었다.

29 松浦政伸, 『北朝鮮帰国事業の政治学: 在日朝鮮人大量帰国の要因を探る』, 155쪽.

30 Tomoomi Mori, “Japanese Wives” in North Korea (DPR Korea), *THE NEWSLETTER* # 82,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Asian Studies (IIAS)*, 2019, p. 19; 「『日本人妻』, 北朝鮮で生きてきた フォトジャーナリスト・林典子さん, 11回訪朝し取材」, 『朝日新聞』, 2019. 9. 4.

31 「世界の中の日本人11 北朝鮮へ夫と共に」, 『朝日新聞』, 1960. 1. 18.

32 「親日的な北朝鮮 丸山邦男」, 『朝日新聞』, 1960. 2. 1.

1970년대는 어떨까. 『요미우리신문』은 1972년 4월 5일부터 5회에 걸쳐 「주체의 본모습」이라는 연재를 게재하였다. 각각의 제목은 「주체의 본모습 1, 비식자(非識字) 퇴치, 농민도 지금은 대표자(代議士)」(4. 1.), 「주체의 본모습 2, 만세의 원점, 일하면 보상받는다」(4. 5.), 「주체의 본모습3 여자다움과 혁명과 “가사부담 없애라”」(4. 8.), 「주체의 본모습4 행복한 고아들, “아버지”는 수상(首相)」(4. 12.), 「주체의 본모습5, “민족의 태양”의 원동력 “대중(大衆)이야말로 선생”」으로, 특파원으로서 북한을 취재한 쓰쿠다(佃) 기자의 연재이다. 기본적으로 북한 정부의 주장을 답습한 보도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1973년 8월부터 9월에는 만수대예술단(万寿台芸術団)의 방일공연이 성사되었다. 이것은 일본조선문화교류협회(日本朝鮮文化交流協會)와 아사히신문사가 주최한 북일우호사업(日朝友好事業)의 일환이었으며, 만수대예술단은 40일간에 걸쳐 일본 전국을 순회하며 공연을 펼쳤다. 일본의 문화인·예술인들로부터도 많은 주목을 받은 이 순회공연은 호평을 받았다.<sup>33</sup> 1970년대에는 북한을 긍정하는 분위기가 일본 사회에 강하게 남아 있었던 것이다.

## 5. 대한항공기 858편 폭파사건: 1980~1990년대

1980년대에 들어서면 1970년대와는 상황이 바뀌게 된다. 북한이 자행한 아웅산 묘역 테러사건과 대한항공기 858편 폭파사건이 발생하였고, 이것이 일본에서도 북한에 대한 이미지가 1970년대와는 큰 폭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sup>34</sup> 아웅산 묘역 테러도 주류 언론에서 크게 다루었지만, 대한항공기 858편 폭파사건은 실행범 두 사람이 일본인으로 가장하여 저지른 범죄이기에 주류 언론에서는 물론이고 일본 사회에서도 특히 크게 주목

33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논문을 참조. 모리 토모오미, 「북일 문화교류: 1973년 만수대예술단 일본 순회공연 사례」, 『다양성+Asia Diverse Asia』 4,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2019(<https://diverseasia.snu.ac.kr/?tag=만수대예술단>).

34 북한은 두 사건 모두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을 받았다. 본 절에서도 『아사히신문』을 중심으로 그 논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

1987년 11월 29일, 115명의 승객과 승무원을 태운 대한항공기 858편은 아랍에미리트연방의 아부다비 국제공항에서 출발하여 서울 김포공항으로 향하던 도중, 안타만 해역 상공에서 폭파되어 추락하였다. 이후 폭파 실행 범은 김현희(金賢姬)와 김승일(金勝一)이었음이 판명되었다.

『아사히신문』은 이 사건에 대해서, 11월 30일 1면에 최초의 기사인 「대한항공기 통신 두절, 버마 근해, 115인 탑승」을 게재하였다. 이 기사는 김포공항 관계자로부터 받은 1차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되어 있으며, 사건인지 혹은 사고인지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다. 사실은 11월 30일 시점에서 일본 미디어의 주목을 끌고 있었던 사건은 대한항공기 858편 사건이 아니라 11월 28일에 발생한 남아프리카항공기 295편 추락사고였다. 여기에는 일본인 승객이 탑승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나중에 사망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아사히신문』이 대한항공기 858편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한 것은 12월 2일부터였다. 일본인 이름으로 된 위조 여권을 소지한 남녀 2인 [하치야 마유미(蜂谷真由美) = 김현희, 하치야 신이치(蜂谷真一) = 김승일]이 음독자살을 기도했다는 점이 보도가치(News Value)에 큰 영향을 미쳤다. 「불명 대한항공기로 아부다비까지 탑승, 남녀 2인이 자살 기도」(1면), 「한국에 커다란 충격, 수수께끼에 국민 혼란, 「북 관여」 난무하는 추측」(3면), 「음독한 여성, 북한과 관계, 한국 당국자가 시사」(30면) 등 2일 시점에서 이미 북한 관여설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아사히신문』은 1987~1988년에 걸쳐 이 사건에 대해 5개의 사설을 게재하였다. 「해명이 필요한 대한항공기 사건」(1987. 12. 17.), 「항공테러의 이면에 숨어 있는 것」(1988. 1. 16.), 「문을 닫는 것만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1988. 1. 27.), 「「납치사건」의 철저한 해명을」(1988. 2. 9.), 「제재 해제 이후가 진짜 고비다」(1988. 9. 14.)가 그것이다.

이 사설들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항공테러의 이면에 숨어 있는 것」(1988. 1. 16.)에서는 “북한 측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한국 당국에 의한 조작

이며 북한은 일체 관여한 바가 없다는 주장을 반복하였다. 그러나 김현희가 대내외적으로 범행을 인정하는 회견을 한 지금, 이 정도로 무마될 수는 없다.”라며, 김현희의 진술에 설득력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북한에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사건의 배경에는 미소 냉전이 낳은 조선반도의 분단과 대립의 역사가 있으며, 그로 인하여 불신과 증오가 증폭되어 왔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며 이 사건을 남북 분단의 구조 속에 위치시킴으로써 사건이 발생하게 된 인과관계를 설명하려고 하고 있다.

「문을 닫는 것만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1988. 1. 27.)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김현희라고 하는 여성은 범행을 인정하는 한편, 자신이 북한의 비밀공작원이며 이것이 상층부의 지시에 의한 행동이었다고 자백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상층부가 관여했다고 하기에는, 현재로서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 중에서 마음에 걸리는 점이 있다. 그것은 UN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테러행위에 대한 비난결의 등 행동에 나설 것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단은 북한의 태도를 지켜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며, 한국 정부의 요청이 있다고 해서 국제무대에서 북한을 궁지로 모는 조치로까지 확대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라고 하고 있다.

「‘납치사건’의 철저한 해명을」(1988. 2. 9.)에서는 이은혜(李恩惠) 문제<sup>35</sup>를 거론하며 “사건과 북한의 관련성은 한층 더 짙어졌다. 여기에서 만일 일본 측 조사를 통해서 ‘납치된 여성’의 존재가 밝혀지게 된다면, ‘북한 범행설’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라고 하며, 일본인 납치 관련 정보에 대해서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이번 발표 내용은 일본과 북한의 관계나 대한항공기 사건 전체에 매우 커다란 영향을 미칠 성질의 것”

35 일본 정부는 김현희의 교육을 담당한 이은혜(李恩惠)라는 인물이 아에코 다구치(田口八重子)라는 인물과 동일인으로 보고, 납치피해자로 인정하고 있다. 日本政府内閣官房拉致問題對策本部 homepage 「北朝鮮側主張の問題点」, <https://www.rachi.go.jp/jp/mondaiten/index.html> (최종검색일: 2022. 7. 4.).

이라고 언급하였다.

이처럼 『아사히신문』은 대한항공기 858편 폭파사건에 대해서 북한의 범행이라고 단정은 하지 않았지만, 일정한 의구심을 가지고 보도를 하였다. 그러나 유보적 태도나 신중한 자세도 보이는 등 북한에 대한 ‘균형감각’을 유지하려고 하였다.

1980년대 후반은 한국에서 민주화가 이루어지고(1987년 6월 ‘민주화 선언’), 1988년에는 서울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는 등 일본에서도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호전되어 가던 시기였다. 한편 아웅산 묘역 테러 사건·대한항공기 858편 폭파사건을 일으킨 ‘범인’으로서의 북한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도 강한 의혹의 시선을 보냈다. 물론 1990년대에 들어서서 1990년 9월 29일에 가네마루 신(金丸信, 자유민주당)·다나베 마코토(田辺誠, 일본사회당)·김용순(金容淳, 조선노동당)에 의한 ‘북일관계에 관한 일본의 자유민주당, 일본사회당, 노선노동당의 공동선언’이 이루어지고, 북한의 대표적인 경음악단인 보천보(普天堡)전자악단이 1991년에 일본 방문공연을 하는 등 북일관계가 호전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가네마루 신의 실각과 그 후의 북핵 위기로 인하여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그 기층을 조금씩 넓혀 나가게 된 듯하다.

한편 1980~1990년대는 ‘일본인 납치 의혹’을 일부 언론이 보도하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아베 마사미(阿部雅美)가 산케이신문 지면을 통해 일본인 납치 의혹을 보도한 것이 1980년 1월이었다.<sup>36</sup>

36 「アベック三組ナゾの蒸発」, 『サンケイ』, 1980년 1월 7일.



## 6. 북일정상회담, 일본인 납치문제, 북일평양선언:

### 2002년이라는 분기점

#### 1) 일본인 납치 인정과 총저널리즘 상황

일본 주류 언론의 ‘북한’ 보도가 크게 변화한 것은 2002년을 전후한 시기이다. 2002년 9월 17일에는 북일정상회담이 열리고, 양국이 북일평양선언을 채택하였다. 이 정상회담은 큰 주목을 받았다. 우선 일본 내각총리대신이 패전 후 처음으로 북한의 최고지도자와 직접 회담을 하고, 양국의 국교정상화를 목표로 하는 북일평양선언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이유는 이 회담에서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일본인 납치를 인정하고 사죄하며 재발방지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이미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 일본인 납치 인정이 결과적으로는 북일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일본 미디어도 예외는 아니었다. ‘북한’ 보도는 2002년 9월 이후, 미디어에 의한 북한 때리기라고 해도 좋을 정도의 ‘총저널리즘 상황’<sup>37</sup>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일본 매스·커뮤니케이션학회<sup>38</sup>에서도 몇 사람의 연구자들 사이에서 공유되었다.<sup>39</sup>

일본의 주류 언론이 총저널리즘 상황에 들어가게 된 이유에 대해, 일본 국민의 여론이 ‘납치문제’에 대하여 분노했고, 주류 언론이 여기에 반응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sup>40</sup> 그러나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약간 신중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2002년 당시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여론의 분노를 주류 언론이 반영한 것이라는 단순한 설명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37 ‘총저널리즘 상황’(総ジャーナリズム状況)은 아라이 나오유키(新井直之)가 제창한 개념. 아라이는 ‘총저널리즘 상황’을 “①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해 모든 종류의 미디어가 동원되고, ② 그 사건 보도에 가능한 많은 지면·방송을 할애하며, ③ 더욱이 보도 자세가 모두 동일하다는 3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新井直之, 『メディアの昭和史』, 岩波書店, 1989, 52쪽. 참조.

38 현재는 일본미디어학회로 개칭.

39 일본매스·커뮤니케이션학회 2003년도 춘계연구발표회 워크숍 보고 「ワークショップ1 北朝鮮報道と総ジャーナリズム状況を考える」(사회: 橋場義之, 問題提起: 岡田幹治, 토론: 柳内道夫), 『マス・コミュニケーション研究』 64, 2004, 193~194쪽.

40 「連載 [ 拉致問題 風化させないために ] 〈上〉世論」, 『新潟日報』, 2021. 11. 10.  
<https://www.niigata-nippo.co.jp/articles/-/12735>(최종검색일: 2022. 8. 1.).

있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일본 내각부의 ‘외교에 관한 여론조사’에 주목해보자. 2002년 10월에 실시한 조사에는 ‘북한과의 국교정상화에 대한 찬반’이라는 항목이 있다.<sup>41</sup>

이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당시)이 일본인 납치를 인정함으로써 북한의 일본인 납치가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북일국교정상화에 찬성하는 사람의 비율이 66.1%(‘찬성’ 23.1% + ‘굳이 말하자면 찬성’ 43%)로 반대 26.0%(‘굳이 말하자면 반대’ 17.9% + ‘반대’ 8.0%)를 크게 상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디까지나 하나의 지표에 불과하지만, 이 시점에서는 66.1%의 사람들이 국교정상화에 찬성하고 있었으며, 북한 같은 나라와는 국교를 정상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다면 납치 문제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주류 언론이 반영했을 뿐이라는 설명은 신빙성이 그다지 높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주류 언론의 ‘납치에 대한 분노’가 여론에 반영되었다는 설이 타당할 수도 있다. 물론 이듬해(2003년 10월)에 실시된 ‘외교에 관한 조사’에서는 ‘북한과의 국교정상화에 대한 찬반’이라는 항목이 빠져 버렸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문제에 관해 단정을 내릴 수는 없다.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하여, 『아사히신문』은 2002년 12월 27일자 기사 「사반세기 가족의 염원, 아사히신문은 어떻게 전달했는가」에서 일본인 납치문제에 관한 지금까지의 『아사히신문』 보도를 검증하는 기사를 양면으로 게재하였다. 약 1만자에 이르는 장문의 기사다. 여기서 『아사히신문』은 1977년 일본인 납치 의혹을 처음으로 보도한 이후, 단속적으로 일본인 납치문제에 관심을 가져왔음을 언급하는 한편, 보도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납치 추궁이 기본적 자세’임을 선언하였다. 이 검증기사에 대해서는 『아사히신문』 2003년 2월 4일자 기사 「세계의 시점, 보다 준민(俊敏)하게, 아사히신문지면심의회·제12기 제14회」에서 심의회 위원인 세키카와 나쓰오(関川夏央)는 “『아사히신문』이 이전부터 납치 사건을 다루어 왔다는

41 内閣府, 「外交に関する世論調査」(2002年10月調査), <https://survey.gov-online.go.jp/h14/h14-gaikou/2-1.html> (최종검색일: 2002. 8. 5.).

사실이 강조되어 있어, 역사적 검증과는 다소 어긋난 톤이 느껴진다. 이 특집은 『아사히신문』이 구메 유타카(久米裕)씨 납치 사건을 특보한 1977년 이후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중요한 것은 1959년 이래 재일코리안의 귀국 사업 등 ‘민족주의운동’을 어떻게 보도하였는가를 검증하는 것이다. 1950년대 후반부터 1976년까지 일본의 분위기, 『아사히신문』의 분위기가 그 후 기본적인 보도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이후 ‘납치 문제 추궁’을 기저에 두면서 북한에 대한 엄격한 언설을 전개해 나간다. 그 보도의 프레임은 『요미우리신문』 등 보수 논조의 주류 언론과 비교해도 거의 차이가 없어졌다.

또한 일본의 주류 언론이 북한에 대한 호칭을 바꾼 것도 이 시기이다. 1971년 삿포로 프레올림픽(삿포로국제스포츠대회) 당시, 북한은 올림픽조직위원회에 ‘북한’[北朝鮮]이 아닌 정식 국명으로 호칭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일本文협에서는 북한의 이와 같은 요청을 받아들였고 협회 소속 각사에서 기사·방송에서 국가 이름을 처음 언급할 때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북한’[北朝鮮]을 병기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2002년 9월부터 2003년 1월에 걸쳐 거의 대부분의 미디어가 일제히 ‘북조선’ 단독호칭으로 전환하였다. 이와 같은 호칭의 전환도 일본인 납치 사건에 대한 각사의 보도 방식과 인과관계가 있음을 강하게 의심해 볼 수 있다.<sup>42</sup>

## 2) 북한 보도의 프레임 고정화

일본인 납치 문제를 아젠다의 중심에 놓은 주류 언론의 보도는 북한을 ‘악마화’(demonization)하는 프레임링을 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 두 신문은 다른 사회문제에 관해서는 논조가 서로 대립하

42 단독 호칭으로 바뀌게 된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 森類臣, 「日本のマス・メディアにおける『北朝鮮』報道の一考察:『北朝鮮』単独呼称への切り替えと背景の分析を中心に」, 『翰林日本学』 15号, 翰林大学校日本研究所, 2009, 119~141쪽.

는 경우가 많지만,<sup>43</sup> 북한과 관련된 보도에서는 논조의 유사성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북한에 대해서는 감정적이고 부정적인 논조를 보이는데, 약간의 정도 차이는 있으나 그 프레임은 기본적으로 다음 4가지로 집약된다.

- ① 일본인을 납치한 행위는 용서할 수 없다. 분노로 대처해야 한다.
- ② 납치 문제 해결 없이는 국교정상화도 있을 수 없다.
- ③ 북한은 테러국가이며, 따라서 비정상이고 위험하다.
- ④ 북한의 핵무기 개발·보유는 심각한 위협이다.

일본인 납치가 보편적 인권을 유린한 것이며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인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일본 국민(일본 국민이 아니더라도)이 이에 대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주류 언론이 저널리즘을 실천하는 기관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감정적인 반응으로만 일관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저널리즘은 냉정하게 사태를 분석하고 해결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코바치(Kovach)와 로젠스틸(Rosenstiel)은 규범연구를 통해 도출해 낸 저널리즘의 원칙 중 한 가지로 “저널리즘은 뉴스의 포괄성 및 균형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였다.<sup>44</sup>

더욱이 북일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2002년 9월 17일의 북일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진 북일평양선언이었을 것이다. 북일평양선언의 본질은 북일 간의 현안을 해결하고 북일국교정상화에 이르는 기반을 정비하는 것이었다. 일본은 북한에 대하여 조선반도 식민 지배에 대해 사죄하고 경제적인 보상을 할 것, 재일조선인의 법적 지위 문제 및 문화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한편 북한은 ‘일본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관련된 현안 문

43 読売新聞論説委員会 編集, 井沢元彦 解説, 『読売VS朝日: 社説対決50年』, 中央公論新社, 2001 등을 참조.

44 Bill Kovach and Tom Rosenstiel, *The Elements of Journalism: What Newspeople Should Know And the Public Should Expect*, Three Rivers Press, 2000, pp. 6~7[ビル・コヴァッチ, トム・ローゼンステール, 『ジャーナリズムの原則』, 日本経済評論社, 2001].

제', 즉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해결하고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일본인 납치 문제는 중요하긴 하지만 북일평양선언에서는 동시 병행적으로 이행해야 할 현안 사항 중 하나의 항목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안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일본 주류 언론은 '일본인 납치문제'를 따로 떼어내어 취급함으로써, 마치 납치 문제 해결이 북일 문제의 기본이자 거의 전부인 것처럼 아젠다를 설정하였다. 이것이 위에서 언급한 프레임의 ①이 되어 고정화되어 갔다. 식민 지배 청산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일본은 가해자이며 북한은 피해자였다. 이 청산의 원칙에 대해 합의한 것이 북일평양선언이었는데도, 일본인 납치 문제에 과도하게 보도가 집중되고 이 문제가 북일 간의 제일 큰 문제로 인식됨으로써 일본이 피해자가 되고 북한이 가해자가 되는 역전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이는 곧 일본의 가해자성을 인정하고 사죄와 배상(경제협력방식)을 명기한 북일평양선언의 근간을 일부 부정하는 현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의 주류 언론은 이 현상을 긍정하고 증폭하였다. 다시 말해 일본의 주류 언론은 북일평양선언의 근간을 부정하는 평론·보도를 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위에서 언급한 ②~③의 프레임이 중첩되어, 북한에 대한 냉정한 사고와 판단은 표출되기 어렵게 되었다. 예를 들어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보유에 대해서는 절대적 악처럼 표상되어, 어떤 방식으로 핵을 포기하게 할 것인가 하는 논점만이 과도하게 부각되어 왔다. 그래서 애당초 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나 북한 측의 논리는 봉쇄되었다. 또 미국을 비롯한 핵보유국은 허용되고, 사실상 보유하고 있는 나라 중에도 비난을 받지 않는 나라가 있는데 어찌서 북한만이 비난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도 없었다. 군사적인 비대칭의 문제가 전제되어 있다는 사실도 논의에서 사상(捨象)되었다. 미사일 발사실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같은 원리를 미사일에 응용할 수 있는 로켓 발사는 일본, 한국, 인도도 하고 있지만, 이 나라들에 대한 비판은 찾아볼 수 없고, 오직 북한만이 항상 비난을 받는다.

프레임 ①~④가 지속되는 가운데 일본과 북한이 동시에 해결해 나가야 할 성질의 ‘북일 문제’는 어느 사이엔가 북한 측이 모두 원인인 듯한 ‘북한’ 문제로 바뀌어 버린 것이다.

## 7. 남북관계·북미관계와 일본 주류 언론의 반응: 2018년

마지막 사례로, 2018년의 조선반도 정세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2018년 1월부터 남북 간에 급격한 접근이 이루어지면서 조선반도 정세의 전환점이 마련될 것으로 여겨졌는데, 과연 이 시기 일본 주류 언론은 어떤 아젠다를 설정하여 프레이밍하였던 것일까. 여기서는 『아사히신문』·『요미우리신문』의 사설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한다. 분석의 대상 시기는 남북정상회담(2018년 4월 27일)과 북미정상회담(2018년 6월 12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5가지 국면으로 나눈다.

국면 ① 2018년 1월 1일~2월 말: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발표부터 평창동계올림픽 종료까지

국면 ② 2018년 2월 말~4월 말: 남북대화 진전, 북한의 활발한 외교 활동

국면 ③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선언

국면 ④ 2018년 5월 초순~6월 초순: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움직임 가속

국면 ⑤ 2018년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과 합의문 채택

앞서 ‘6. 북일정상회담, 일본인 납치문제, 북일평양선언: 2002년이라는 분기점’에서 정리한 주류 언론의 인식 프레임은, 2018년 6월 시점에도 본질적인 변화는 없었다. 『아사히신문』·『요미우리신문』 모두 북한은 본질적으로 비정상국가·무법국가이며 핵무기 개발과 보유를 배경으로 협박과 약속위반을 되풀이하는 폭력집단이라는 프레임을 유지했다. 따라서 북한이

2018년 1월 1일 이후 한국에 대화를 요구해 온 것에 대해서도 이는 우호적인 대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한미일의 연대를 붕괴시키려는 북한의 전술이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경제제재를 수단으로 북한을 압박해서 변화를 이끌어 내는 방법론을 원칙으로 삼는다는 점도 『아사히신문』·『요미우리신문』의 공통된 주장이다. 북한은 대화가 통하지 않는 상대이자 신뢰할 수 없는 상대이므로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제재를 통한 압박밖에는 없다는 인식인 것이다.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두 신문의 평가는, 올림픽이 정치에 이용되었고, 북한의 ‘미소외교’, ‘용화공세’의 무대가 되었으며, 한국은 북한에 주도권을 빼앗기고 있다는 것이었다. 한국은 남북관계에만 몰두해서는 안 된다고까지 주장했는데, 남북관계만 중시하면 자칫 국제적인 대북포위망에 구멍을 낼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것은 남북관계보다도 한미일 삼국관계를 중시하고, 대결자세 혹은 힘과 이데올로기의 균형을 무너뜨리지 않고 유지한다는 ‘남방삼각론’(南方三角論)과 유사하다.

두 신문 모두 ‘판문점선언’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지 않았다. ‘10·4 선언’으로부터 커다란 진전이 없고, 핵무기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 CVID)도 명기되지 않은 불충분한 선언이라는 것이다. 또 남북경제협력은 국제사회의 대북포위망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계속하여 경제제재의 중요성을 호소하였다.

두 신문은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준비가 진행됨에 따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앞서나가는 자세를 경계하고, 핵무기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나 기한을 명기한 일정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요미우리신문』은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견제하여, 종전선언은 정치적인 메시지에 지나지 않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계속되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주둔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과 합의문에 대해서 『아사히신문』은 “역사적인

진전에 세계가 주목한 것은 당연하지만, 두 사람이 교환한 합의는 획기적이라고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빈약한 내용이었다”(6월 13일 사설)라고 비판하고, 『요미우리신문』도 “정상회담에서도 추상적인 합의밖에는 도출해 내지 못한 것은 유감이다. 북한이 지금까지 취한 조치라고는 핵실험 중지와 핵실험장 폭파뿐이다. 김 위원장이 핵을 포기할 결단을 내렸는지는 불분명하다고밖에 할 수 없다.”(6월 13일 사설)라고 한 것과 같이, 합의 내용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두 신문은 핵무기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라는 원칙이 명기되지 않은 것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고, 『아사히신문』은 “앞으로 예정된 북미 간의 협의에서 착실하게 비핵화 조치를 구축해 나가지 않는 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는 칭찬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며, 회담 개최의 성과를 평가절하하였다. 또한 『요미우리신문』은 경제제재를 계속해야만 한다고 주장하였고, 『아사히신문』은 인권문제에 대한 감시를 주장하였다.

국면 ①~⑤에 대한 두 신문의 논평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국면 ① 북한의 언설이나 행동은 모두 전술적 차원으로 이해해야 하며, 커다란 정책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미소외교’, ‘융화정책’에 현혹당해서는 안 된다.

국면 ② 국제적 연대를 통한 경제제재로 북한에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면 ③ 미일 관계에 대한 북한의 이간책을 경계해야 한다.

국면 ④ 핵 문제가 가장 중요하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는 필수다. 핵무기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 완료 이후에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중전선언’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국면 ⑤ 판문점선언,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기 어렵다.



결국 국면 ①~⑤에 걸쳐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 모두 조선반도의 정세를 이해하는 시점과 논리에는 큰 차이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근거에는 2002년 9월 이후 고정된 북한 프레임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즉, 북한을 비합리적인 존재이자 무법·위험한 독재국가로 규정하는 전제 위에서 한국, 미국과의 회담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다. 고정된 프레임을 독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8. 결론

본 논문에서는 의제설정과 프레임 개념을 보도분석의 기초에 두고, 시대별로 일본 주류 언론의 북한 보도를 살펴보고 그 내러티브를 이해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어디까지나 개관(概觀)이지만, 필자가 관견(管見)한 바로는 선행연구에서도 북한 보도를 통시적으로 파악한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본 논문을 통해서 주류 언론의 북한 보도의 중요한 변화를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다. 1960~1970년대 북한 보도는 귀국사업과 관련한 휴머니즘 보도와 북한에 대한 긍정적 보도가 반복되는 것이 특징적이었다. 또한 2002년 9월이 북한 보도의 중요한 전환점이기는 하지만, 북한 보도가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였다는 사실도 지적하였다. 특히 일본인 납치 문제는 식민지 지배의 청산 문제에 있어서 ‘일본=가해자, 북한=피해자’라는 관계성을 역전시켜서 ‘일본=피해자, 북한=가해자’로 만들었다. 이 역전현상은 북일평양선언의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었지만, 주류 언론은 역전 현상을 줄곧 긍정하였다. 바꾸어 말하면, 주류 언론이 북일평양선언을 부정한 것이다.

그리고 2002년부터 비교적 단기간에 구축된 북한 보도의 프레임과 이것에 기반한 구도가 현재에 이르기까지 강고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앞으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삼아, 북한 보도의 내러티브 분석을 보다 정밀하고 두텁게 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와 동시에 주류 언론의 한

국 보도와 북한 보도를 대비하여 분석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한국과 북한의 긍정적/부정적 보도가 역전된 것은 1980년대 후반이지만, 2000년대 초반 한류 붐을 거쳐 현재에는 한국과 북한이 같은 민족의 분단국가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두 나라에 대한 이미지의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일본의 주류 언론 보도에서 한국의 존재가 북한 보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거의 확실하지만, 통시적으로 그 상관관계를 실증할 필요가 있다. 이는 앞으로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 이 글은 일본어로 작성되었으며 김민(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박사과정)에 의해 번역되었다.

---

투고일자: 2022. 8. 1. | 심사완료일자: 2022. 8. 3. | 게재확정일자: 2022. 8. 8.